

III. 최신환경단신

◎ 자동차에 대한 각종 환경규제 크게 완화

자동차 제작·운행·검사 등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환경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업체는 자동차 사용자에게 자동차 정비 안내서를 의무공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그런 의무가 면제돼 자율적으로 정비 안내서를 제공하게 된다. 또 자동차 제작사에 부과해 온 배출가스정기검사 인력구비요건(의무)도 폐지된다.

자동차사는 이와 함께 새해부터 결함확인검사에 필요한 연간 자동차 판매 현황을 관계당국에 제출하는 의무를 면제받고 그 대신 관계당국이 해당자료를 반드시 필요로 할 경우에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또 제작차 배출가스검사 수탁기관의 경우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같은 지정제도가 폐지된다.

◎ 현대상선, 해양환경모범선박 최다보유

현대상선(사장 김충식)이 국내 선사 중 가장많은 '해양환경모범선박'(GREEN SHIP)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지정된 해양환경모범선박은 모두 58척으로 이중 현대상선 소속선박이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15척에 달했으며 그다음으로는 대한해운 9척, 한진해운 5척의 순이었다.

해양환경모범선박은 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효과적인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 97년 도입한 제도로 ▲4백t 이상 선박 중 선령이 15년을넘지 않고 ▲최근 3년간 해양오염방지법에 정한 벌금이나 과태료 납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출입검사를 최근 3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선박이 지정된다.

해양환경모범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은 ▲임의적인 선박입출입검사가 면제되고 ▲정기 선박 출입검사도 원하는 때 받을 수 있으며 ▲해양경찰청이 주는 해양환경상의후보가 될 수 있다.

현대상선은 제1호 환경모범선박으로 지정된 '현대아틀라스'호를 비롯해 지난 97년에만 4척의 광탄선이 해양환경모범선박으로 선정된데 이어 지난해에도 11척의 선박이 새로 인증서를 받았다. 현대상선은 또한 자동차선 3척과 유조선 1척, 광탄선 1척이 해양환경모범선박으로 지정되기 위한 검사를 모두 마친

상태여서 조만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포항제철] 2003년까지 환경투자 7,600억

포항제철(회장 유상부)이 환경규제와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기준에 맞추기 위해 오는 2003년까지 7,600억원을 투자,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을 현재의 70%수준으로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슬래그와 슬러지 등의 폐기물 자원화도 적극 추진, 현재 94%인 폐기물 자원화율을 99%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포철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장기 환경·에너지 투자 계획과 실천 계획을 마련, 6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포철은 2003년까지 총 설비투자비의 8%선인 7,600억원을 투자해 청정제철소를 실현해 나가는 한편, 설비투자 와 조업방법 개선을 통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5.5%에 해당하는 1,340억원을 절약키로 했다. 또 에너지 사용설비를 개선해 배열회수율을 지난해 20%선에서 2003년까지는 30%수준으로 높이는 한편, 공장별 에너지손실 요인도 줄여 나갈 계획이다.

◎ 환경기초시설 수주경쟁 치열

지방자치단체들이 민자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을 크게 늘리면서 국내민간기업과 외국업체들간에 이들사업을 따내기 위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30조원을 투입해 6백20여개의 환경기초시설을 지으면서 이중 10조원의 자금을 민자로 유치할 방침이다.

또 파주, 서천, 이천, 군포, 양주, 봉화 등 6개 지자체도 민자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기로하고 올해중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경북 문경, 전주 등 15개 안팎의 지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의 민자유치를 추진중이며, 광역시로는 제주도가 내년에 건설할 소각시설을 민자유치방식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환경기초시설을 민자로 건설키로 하면서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업체들도 수주경쟁에 적극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건설비용이 1천1백70억원에 달하는 파주의 하수종말처리장건설은 우수한 외국업체들 까지 눈독을 들이고있다.

프랑스의 비벤디, 제너럴 데조, 호주의 보비스 등을 비롯한 10여개 업체들은 국내사와 합작형식으로 민자유치사업 참여를 추진하고있다.

민자유치사업이 이처럼 활성화되고있는 것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정부가 최대 70%까지 국고보조를 하고있는데다, 참여업체에 대한 수익률을 국제수준인 12~18%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에 뛰어드는 민간기업들도 급증하고 있다. 양평의 경우 민간위탁 입찰에 30여개의 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 환경부, 광양만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추진

환경부는 2011년까지 대규모 국가공단이 조성될 예정인 광양만권역 전체를 올 상반기 중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광양만권역 개발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고 지역내 각 가정의 난방시설 기준과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돼 정부부처간, 정부와 주민간 마찰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단개발로 환경악화가 우려되는 광양만권역 5개 시·군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환경개선대책'시안을 건설교통부,전남도,경남도에 보내고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 시안은 2011년까지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화력발전소, 철강·석유화학 벨트 등 국가공단이 조성되는 2040만평 규모의 하동,순천,여천 등 광양만권역 전체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2011년에는 아황산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재보다 2~3배 급증, 환경재앙이 우려됨에 따라 저황·청정연료 사용 등 오염저감대책을 마련토록 관계당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 시안대로 공단지역을 포함한 광양만권역 전체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시설 뿐 아니라 일대의 주거지역과 차량 등도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 내년부터 공장폐수 배출 엄격 제한... '청정지역' 크게 늘려

내년부터 공장폐수의 배출이 엄격히 제한되는 "청정지역"의 면적이 크게 늘어난다.

환경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폐수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 조정방안"을 고시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등 19개 읍·면·동으로 1천5백80에 달한

다.

반면 청정지역이었던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4)은 오히려 배출기준이 훨씬 완화된 "나지역"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청정지역의 면적은 현재의 4만3천3백 93평방km에서 4만4천9백69평방km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전국토 면적의 45.3%에 달한다.

청정지역에서는 공장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이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60~1백20 / 이하에서 30~40 / 이하로 강화돼 상수원보호구역 등과 같은 수질 환경기준 등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해양부, 북한과 해양환경분야 상호협력관계 구축키로

해양수산부는 북한과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상호협력관계를 구축키로 했다.

해양부는 오는 3월 열릴 예정인 북서태평양실천계획(NOWPAP) 제4차 정부간 회의에서 북한과 황해 및 동해의 해양오염 문제를 논의한다는 계획 아래 북한의 회의참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해양부는 황해와 동해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보호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회의에 참가하도록 중용해줄 것을 중국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북한은 92년 NOWPAP 창설 직후 열린 전문가회의에 한차례 참석했을 뿐 이후 열린 정부간회의와 각종 전문가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 해역의 오염상태에 대한 공식적인 분석자료는 없으나 동해에 비해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황해의 오염상태가 심각할 것으로 해양부는 추정하고 있다.

◎ [한.중] 황해 환경협력강화 합의

해양수산부는 '황해환경오염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조사를 실시키로 중국측과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양부는 지난 11일부터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한.중해양과학 기술협력공동위원회에서 황해의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상호협력관계를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해양부는 남극 공동조사 추진과 남극보급물자 공동수송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올해 실시될 예정인 중국의 북극해 탐사에도 동참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해양부는 이밖에도 심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했으며 '황해해양심포지엄'을 오는 5월 서울에서 열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 EU, 한국산 자동차 CO₂ 배출감축 요구

유럽연합(EU)이 역내로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섰다.

한국 정부는 EU측의 입장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문제가 올해 한국-EU간 통상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17일 외교통상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19일부터 이틀간 한국에 협상단을 파견,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서 국내 업계관계자들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관한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EU집행위는 이번 협상에서 최근 EU 자동차업계가 승용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km주행시 현재의 186g에서 오는 2008년까지 140g까지 낮추겠다고 집행위와 약속한 점을 들어 한국 업계도 유사한 수준의 감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에 앞서 일본 자동차업계에 대해서도 최근 같은 요구를 한 EU 집행위는 내달 중반까지 한국 및 일본 업계와 협상을 마치고 오는 3월 EU환경장관 이사회에 합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는 전했다.

EU 집행위는 한국 업계가 합당한 수준의 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역내 진출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포함한 차별적 대우를 하겠다는 압력을 함께 행사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EU지역에 자동차 38만대를 팔아 지난 97년 대비 38%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에 EU업계는 97년에 비해 80% 가량 줄어든 8백여대를 한국에 파는데 그쳤다.

◎ 환경관련 시설관리업무 민간으로 넘어간다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소각로, 축산폐수·분뇨·생활폐기물처리장 등 환경관련 시설관리업무가 올 1·4분기중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으로 넘어간다.

또 가로등, 휴양림 등 공공시설관리 업무와 폐기물수거, 주차단속 등 지자체의 일반사무도 상당수가 올해안에 민간에 위탁된다. 24일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연차적으로 지자체별 공무원수의 최소 5% 이상 규모에 해당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 이를 공무원 20% 추가감축 계획과 연계시키기로 하고 이미 추진지침을

내렸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위탁에 나서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에 하수처리장, 쓰레기소각로, 가로등, 휴양림 등 공공시설관리 업무를 대거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 야생동물공동감시망 구성

국내 야생동물의 밀렵과 불법 유통에 대한 전국 공동감시망이 구성된다. 야생동물밀거래조사단(단장 장문준)은 야생동물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감시망을 올해 말까지 구축하고, 의심이 가는 지역 등에 구매자를 가장한 조사단 소속 정보원을 투입해 밀거래 사안이 확인되면 이를 검찰 등 당국에 고발하는 감시망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 98년 3월 발족, 전국에 49명의 정보원을 두고 76건의 밀거래 사건을 적발해온 이 조사단은 {공동 감시망은 환경 운동가뿐 아니라 시민들이 회원으로 나서는 고발 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